SSM반대 동네수퍼 주인들 거리로

1인 시위… 서명운동… 법원서 호소 집회

지역 상권을 잠식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진출할 때 마다 지역 상인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건축허가 신청 반려 등으로 견제하고 있으나 입점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26일 북구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장귀환)가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건축허가 문제로 북구청과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지역 상인들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도 삼성 테스코 측은 동림동 일대에 가맹점 SSM으로 편법 입점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의 도를 넘는 횡포에 광주시와 광주고법이 적극 맞서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부동산 개발 업체인 S법인이 북구 삼각동 고려고 인근에 거대한 규모의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삼성테스코가 제3자를 이용해 우회입점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광주고법은 지역 상권보호 취지로 북구청이 제기한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S법인은 지난 2월 북구 삼각동에 연면적 2만4661㎡, 지하·지상 각 4층 규모의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북구청으로부터 영세상인 상권보호를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업체는 법원에 불허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북구청이 관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 대책위 "삼각동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삼각동은 물론 오치동, 매곡동, 일곡동, 용봉동, 문흥동, 우산동 등 인접 지역 상인 3000여 명이 생존권에 타격을 받게 된다"며 "대형유통업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관련 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는 우회 입점의 부당성을 알리고 주민 22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또 선고가 나기까지 삼각동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 부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패소하면 입점 예정지에서 천막농성을 펼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만나 대형마트 입점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입점 저지" 26일 오후 2시 북구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원회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북구 삼각동 대형마트 입점 저지 및 지역경제 지키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해야하며 광주지법도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기업 경기회복 기대감

광주상의 150개 제조업체 4분기 경기전망 조사

자동차·가전 등 주력업종 수출·내수 호전 꼽아

광주·전남 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 4·4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106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분기(119)보다 낮지만 6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웃돈 것으로, 앞으로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가 지난 분기에 비해 '호전된다'고 예상한 업체(30.0%)가 '악화된다'고 예상한 업체(24.0%)보다 많았다. 경기상황이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6.0%였다.

원자재 가격 불안정과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기 둔화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와 생활가전 등의 수출 및 내수 판매 활성화로 경기 호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수출(120→105)과 내수(116→102)가 지난 분기보다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고, 생산설비가동률(118→100)과 생산량수준(122→100)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원자재 가격 불안정으로 원재료구입가격(35→44)은 부정적으로 내다봤고, 제품판매가격(109→93) 하락, 제품재고(95→95) 증가 등으로 자금사정(93→84)은 여전히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경상이익(80)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경기 예측과 관련해 'U자형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42.9%, 'V자형 회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5.1%로 조사됐다. 또 앞으로 국내경기에 대해 '저점을 횡보'(41.8%)하거나 '하락세를 나타낼 것'(10.2%)으로 전망한 기업이 절반을 넘어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영애로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18.4%), 자금(15.3%), 인력난(14.3%), 내수 부진(12.2%) 등을 많이 꼽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1년형 김치냉장고 90종 출시

삼성광주전자

삼성광주전자는 26일 스탠드형 26종과 뚜껑형 64종 등 2011년형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 90종을 선보였다.

새로 나온 스탠드형 제품은 칸별 냉각기로 김치가 가장 맛있게 보관되는 -1.2℃를 상시 유지하는 독립냉각 플러스 기능을 갖췄다.

또 냉기를 오랫동안 머금을 수 있는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한 쿨링홈바를 채용해 김치를 아삭한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해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이 제품의 중실은 서랍의 6면을 모두 철판으로 감싸는 직접냉각방식이 적용돼 차가운 땅속의 김칫독에 김치를 통째로 묻어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덧붙였다.

또 김장김치와 계절김치를 구분해 보관하는 맛 관리 프로그램 외에 스마트에코 시스템과 수분조절 기술이 적용돼 김치뿐 아니라 곡류, 육류, 어류, 야채 등을 최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잡이를 누르면 가볍게 서랍이 열리는 이지 핸들과 살짝만 밀어도 서랍이 빨려 들어가는 오토 클로징 기능도 갖췄다.

디자인으로는 명품 패턴 디자이너인 카렌 리틀과 함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갤럭시 블랙, 퀸스가든 럭셔리 등의 프리미엄 패턴을 선보인다. 가격은 스탠드형이 130만~240만원, 뚜껑형은 50만~140만원.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남양건설 회생절차 개시

법정관리 중인 남양건설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26일 남양건설에 대한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건설의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정회계법인의 보고를 받아들여 오는 10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회계법인은 "남양건설의 청산가치는 1312억원이지만 계속기업가치는 2508억원"이라고 보고했다.

남양건설은 앞으로 채권감면, 상환시기 조정 및 출자전환 등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법원은 다시 관계인집회를 소집해 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를 묻게 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729.76 (-5.03)
▼ 코스닥지수	464.53 (-3.28)
▼ 금리 (국고채 3년)	3.54% (-0.03)
▼ 원·달러 환율	1,190.00원 (-6.0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캠코, 광주·전남 7억 규모 국유재산 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지부(지부장 서광일)는 26일 광주·전남지역 사무실과 대지 등 7억원 규모의 국유재산 4건을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매 물건은 국유재산으로 5억원 규모의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옛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실을 비롯해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대지(매각예정가 1억9691만원),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대지(1180만원), 광주시 서구 매월동 농경지(3722억원) 등이다. 특히 영암의 사무실은 감정가 6억2803만원에 매각예정가 5억242억원으로 감정가보다 매각예정가가 20% 낮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 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개찰 결과는 입찰 마감일 다음날인 9월1일 발표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지참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문의 062-231-3094.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택 실수요자 DTI 규제 완화 검토

29일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5~10% 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오는 29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과천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부동산 관련 부처는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은 주말회동에서 DTI 완화폭과 대상 등 쟁점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말에 (관계부처 장관 등이) 다 모이는 자리가 있고 당정회의도 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지역별로 40~60% 적용되는 DTI 상한을 5~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10%포인트를 올리자는 주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